

보도자료			
금융위원회	보도	2017.4.21(금) 조간	배포 2017.4.20(목)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	담당자	김 태 훈 사무관(02-2100-2835)
	이 형 주(02-2100-2830)		서 지 은 사무관(02-2156-2836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		최 치 연 사무관(02-2100-2991)
	신 진 창(02-2100-2990)		신 상 록 사무관(02-2100-2961)
	금융위 보험과장		서 나 윤 사무관(02-2100-2611)
	손 주 형(02-2100-2960)		홍 석 린 팀장(02-3145-8040)
	금융위 서민금융과장		김 동 규 팀장(02-3145-7795)
	하 주 식(02-2100-2610)		이 창 윤 팀장(02-3145-7447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		정 미 선 팀장(02-3145-8412)
	민 병 진(02-3145-8020)		신 진 환 수석(02-6362-0278)
	금감원 생명보험국장		한 덕 규 팀장(051-794-3040)
	박 성 기(02-3145-7790)		
	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		
	김 태 경(02-3145-7550)		
	금감원 서민·중소기업지원실장		
	장 상 훈(02-3145-8410)		
	신복위 제도기획부장		
	민 영 안(02-6362-2024)		
	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장		
	이 중 국(051-794-3030)		

## 제 목 :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(속보치) 점검 및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

◇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금년 3월이후 가계대출  
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(금감원 속보치 기준)

\* 가계대출 증가(조원) : ('16.1Q) +17.9 → ('17.1Q) +15.3 [△2.6]

◇ 연체발생을 최대한 사전 예방하고, 연체가 이미 발생한 경우  
차주부담을 완화해 주는 「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」 마련

연체 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「가계대출 119프로그램」 도입</li> <li>일시적으로 상황이 곤란한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최대3년 유예</li> </ul>
연체 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체금리 합리적 산정을 위한 「연체금리체계 모범기준」 마련</li> <li>서민층 차주가 신청시 금융회사 경매 실행을 최대 1년 유예</li> <li>연체차주의 원활한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「담보를 매매 중합 지원 프로그램(신복위·캠코)」을 마련</li> </ul>

- 1 -

## I. 회의 개요

- 정정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'17.4.20일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」를  
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(금감원 속보치)을 점검하고,  
「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」을 논의·확정하였음

### <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개요>

- 일시/장소 : '17.4.20(목) 14:00 /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금융위 부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금감원 부위원장 / 은행·생보·손보·저축은행·여전협회 협회장, 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·산림조합 신용 부문 대표 / 주택금융공사·캠코 사장,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

## II.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 속보치

◇ '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가 그간의 정책효과  
등으로 금년 3월부터 쏙 업권에 걸쳐 증가세가 둔화

- 가계부채는 '16년말 1,344조원(한은 기준)으로 저금리 기조 및  
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으로 '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

\* 가계신용(한은)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13)5.7 (14)6.5 (15)10.9 (16)11.7

- 그간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등으로 은행권은 '16.12월부터,  
2금융권은 '17.3월부터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

- (은행권) 은행권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'16.12월  
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

\* 은행 가계대출 증감(조원) : ('16.12월)0.9 ('17.1월)△2.1 (2월)1.2 (3월)2.0  
[주금공 양도분 제외] ('15.12월)7.2 ('16.1월) 0.9 (2월)1.2 (3월)3.5

- 다만,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 
중도금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으며,

\* '17.1분기 신규승인은 분양물량이 유사한 '14.1분기 보다 많음

\* 중도금대출 신규승인(조원) : ('14.1Q)8.6 ('15.1Q)11.6 ('16.1Q)14.8 ('17.1Q)9.6  
1~2월 분양물량(만호, 국토부) : ('14)1.7 ('15)2.4 ('16)2.5 ('17)1.7

-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·고정금리 대출상품인  
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

\*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(조원) : ('16.12)3.2 ('17.1월)2.4 (2월)3.6 (3월)3.8

□ (2금융권)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, 수신 증가 등에 따라 '17.2월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

-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(3.13),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'17.3월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

\*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(조원) : ('16.12월)4.6 ('17.1월)3.0 (2월)4.0 (3월)2.3  
(15.12월)5.5 ('16.1월)2.2 (2월)2.5 (3월)3.3

- ① (상호금융) '17.1분기 증가액은 5.8조원으로 전년동기(4.2조원) 대비 증가세가 다소 가파르나,

- 3월 이후 부터는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(2.1조원)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(1.9조원)되는 모습

- ② (보험) '17.1분기중 증가액은 1.3조원으로, 전년동기(1.4조원) 대비 증가세가 다소 완화

- ③ (저축은행·여전사) '17.1분기중 증가액은 2.2조원으로 전년 동기(2.4조원) 대비 증가세가 다소 완화

< 가계대출 증감 추이 (금감원 속보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	'16년 1분기	1월	2월	3월	'17년 1분기	1월	2월	3월
은행	+9.9	+2.1	+2.9	+4.9	+6.0	+0.1	+2.9	+3.0
(주금공·양도분제외)	+5.6	+0.9	+1.2	+3.5	+1.1	△2.1	+1.2	+2.0
제2금융권	+8.0	+2.2	+2.5	+3.3	+9.3	+3.0	+4.0	+2.3
상호금융	+4.2	+0.9	+1.2	+2.1	+5.8	+1.8	+2.1	+1.9
신협	+0.7	+0.2	+0.2	+0.3	+0.4	+0.2	+0.1	+0.1
농협	+2.1	+0.4	+0.6	+1.1	+2.7	+0.7	+1.1	+0.9
수협	+0.04	△0.02	+0.01	+0.05	+0.1	△0.01	+0.03	+0.04
산림	+0.04	+0.01	+0.01	+0.02	+0.1	+0.03	+0.04	+0.04
새마을금고	+1.3	+0.3	+0.4	+0.6	+2.5	+0.9	+0.8	+0.9
보험	+1.4	+0.6	+0.5	+0.3	+1.3	+0.4	+1.0	△0.1
저축은행	+1.4	+0.5	+0.4	+0.5	+1.1	+0.6	+0.5	+0.1
여전사	+1.0	+0.3	+0.4	+0.4	+1.1	+0.1	+0.5	+0.4
소금융권 합계	+17.9	+4.3	+5.4	+8.2	+15.3	+3.1	+7.0	+5.2

\*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, 여전사의 경우 주요 회사외 추정치 사용

[참고] 3월에 이어 4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추세 지속

- \* 총 업권 증가액(4.1~7월) : ('16년) 2.3조원, ('17년) 0.8조원
- \* 은행(양도분 제외) 증가액(4.1~7월) : ('16년) 1.17조원, ('17년) △0.53조원
- \* 상호금융 증가액(4.1~7월) : ('16년) 0.64조원, ('17년) 0.12조원

- 3 -

### III. 평가 및 대응방향

#### 1. 평가

□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,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

- \* 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('10) 0.5/6.4 → ('16) 43.0/45.1
- ② 부채 대부분(70.2%)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(소득 4~5분위)가 보유
- ③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('16.12말, 연체율 0.26% BIS비율 14.9%)

-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, 부동산시장 안정화, 소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

\* 소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,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(총체적 상환능력 심사) 도입 추진

□ 다만,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,

-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

-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, 저소득 서민층, 자영업자,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

\* '17.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(+0.58%p 상승) 등으로 '16.9월대비 +0.56%p 상승(2.83%→3.38%)

#### 2. 향후 대응방향

◇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,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,

-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층,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

◇ 아울러,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, 일자리창출 등 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법정부적으로 지속 추진

- 4 -

①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

- 최근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,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·관리
  - \* 상호금융, 저축은행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중(금감원)
- 고위험대출 관련 총당금 확대 등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

②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

-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,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쏙업권·소대출에 적용
  - \* 은행('16.2월), 보험('16.7월), 집단대출('17.1월),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('17.3월)
- 고정금리·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
  - \* (은행) 고정금리 42.5→45%, 분할상환 50→55% / (보험) 고정금리 25→30%, 분할상환 45→50% / (상호금융) 분할상환 15→20%
-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및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「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」 마련(2분기중)

③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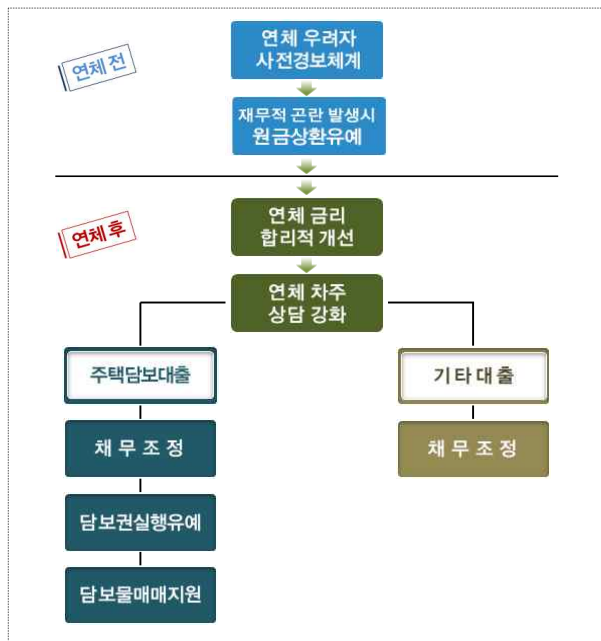
- 정책 서민금융('16년 5.7조원 → '17년 7.0조원) 및 정책 모기지('16년 41조원 → '17년 44조원) 공급을 대폭 확대
- 「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」을 하반기중 마련(관계부처 합동)
  - 자영업자가 과밀업종·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
  - 컨설팅·교육, 정책자금 공급, 폐업·전직 지원,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(기재부·중기청 등 협업)
- 금리상승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(☞ IV)

- 5 -

#### IV.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

##### 기본방향

- (연체前) 1. 연체前 사전 경보체계 마련,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
- (연체後) 2. 연체금리 산정근거 명확화,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유도
3. 담보권 실행前 상담을 의무화하고,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, 담보권실행 유예 등 맞춤형 지원



- 6 -

## 1.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

### (1)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정보체계 (“가계대출 119”) 구축

- ☐ **소 금융권 ·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「연체우려자 사전 정보체계 (“가계대출 119”)」 구축**(업권별 모범규준, 은행권 ‘17.下, 보험 · 상호금융 · 저축은행 · 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)
  - **CB정보 및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**하고,
    - \* 연체우려차주 기준(예시) :
      - i)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(예 : 외부등급 7등급) 이하로 하락
      - ii)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
      - iii)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(예 : 30일) 이상 등
  - **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**하고, 지원이 필요한 경우 **원금상환유예** 등을 지원

### (2) 실직 · 폐업자 등 원금상환 유예 지원

- ☐ **실직 · 폐업 · 질병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**(업권별 모범규준, 은행 ‘17.下, 보험 · 상호 · 저축은행 · 여전사도 조속 시행)
  - **(자격요건) 비자발적 실업, 폐업, 피상속인의 사망, 질병 등 채무상황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**하는 경우  
(주담대에 대해서는 동 차주 중 1주택(6억원 이하)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)
    - \* 실업수당 확인서류, 폐업신청서류, 사망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으로 증빙
  - **(지원내용) 최대 3년간**(원칙 1년 + 2회 연장) **원금상환 유예**
    - \*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(원금+이자) → (이자)로 완화되고,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
    - ※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

- 7 -

### (3)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

- ☐ **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**하고, **적합한 지원제도 안내** 등을 위하여 **차주의 소득 · 주소지 등 주기적 갱신 유도**  
(업권별 모범규준, 은행 ‘17.下, 보험 · 상호금융 · 저축은행 · 여전사 조속 시행)
  - **(주담대) 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**에 대해서는 **차주가 정보갱신시 인센티브 제공**을 통해 **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유도**
    - \* 차주 정보갱신시 제공가능한 인센티브(예시) :
      - ① 장기간 고객관리가 미실시된 차주에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상담 과정에서 소득·주소지·연락처 정보 등 갱신
      - ②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
  - **(신용대출)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 · 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**
- ☐ **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**하고,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 추진(‘17년 하반기)
  - ※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

### (4) 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

- ☐ **연체 전 · 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**되기 위해 **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 활성화**  
(업권별 모범규준 마련)
  - **(은행권) 자체적인 상담인력 운영 강화**(‘17년 하반기)
    - 차주의 접근 용이성 및 은행 준비여건 등을 감안하여 **거점 점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**하고, **점진적으로 확대**
  - **(제2금융권) 인력자원 등이 부족한 상호금융, 저축은행 등은 신복위 ·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**
    - 지역별로 신복위 · 진흥원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, 안내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 해당 창구에 즉시 연계 · 상담

- 8 -

## 2.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

### (1) 전 업권 「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」 마련 ('17년 하반기)

-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
- 채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, 연체 관리비용,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

### (2)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(모범규준, '17년 하반기)

-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,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

### (3)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(모범규준, '17년 하반기)

-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시  
\* 은행·보험·상호금융·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
-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(예 : 자금운용 기회비용, 관리비용, 대손비용 등 포함 여부)에 대해서도 공시  
\* 대출 가산금리는 ①업무원가 ②법적비용 ③유동성프리미엄 ④신용프리미엄 ⑤목표이익률 ⑦가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공시

### (4)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 ('17년 중 마무리 예정)

-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 검토·추진

- 9 -

## 3.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

### (1)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

-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(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, 은행 '17.下, 보험·상호금융·저축은행·여전사도 조속 시행)
-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,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안내
- 차주의 연락처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  
\*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미실시 사유 등 명시

### (2)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마련

-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, 심사를 거쳐 소 금융회사(신복위 협약기관)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 마련(신복위 협약 개정, '17년 하반기)
- (신청방법)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 「담보권 실행유예」연계  
\*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 가능토록 체계 구축
- (지원요건(안))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대해 지원
  - ①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
  -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(보금자리론 기준), 1주택 소유자
  - ③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(보금자리론 기준)
  - ④ 주택매각,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하여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
  - ⑤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% 이상(금액 기준) 동의

※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·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

- 10 -

- (지원내용)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(원칙 6개월 + 1회 연장)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, 채권매각 금지
- \*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,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
- (추가지원) 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·차주의 채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 강화\*
- \* ①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 강화(예 : (분할상환) 최장 20년간 상환 → 최장 35년 분할상환 (상환유예) 최장 3년 → 최장 5년 등)
- ②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우대 등

### (3)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

- 「담보권실행 유예제도」와 연계하여,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「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」 마련  
(신복위·캠코 운영기준 마련, '17년 하반기)
- (신청방법)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 「담보물매매 종합지원」 연계
- \*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-stop 안내
- (지원내용)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\*으로 매각·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- \*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,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경매보다 유리
- (매각지원)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·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매각 지원
- (공매절차) 캠코가 운영중인 공매시스템(온비드)을 연체차주의 주택 공매절차에 활용
- (매각후 사후처리) 매각이 이루어지면,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,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
- ※ 일정시점(예 : 담보권실행 유예기간)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

- 11 -

## 기 대 효 과

### ①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→ 연체발생 사전 방지

-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
- 실직·폐업·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
-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,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
- 차주의 소득,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

### ② 연체가 발생한 차주 → 주거안정·상환부담 완화

-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마련 가능
-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
-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
-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

- 12 -

## 향후 계획

- 금융위·금감원, 업권별 협회, 금융회사, 연구기관 등과 함께  
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·표준약관  
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

- <첨부> 1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 
2. '17.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 
3.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
4. 주요 Q&A

